

가정 내 양육 지원정책 개선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가정 내에서 양육의 실질적인 질 보장으로 관심이 확대·발전되고 있다.

기관에서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보장과 양육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이는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을 유목화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1. 들어가며

‘양육’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다시 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양육’은 보람이나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이유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기관 보육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으로 대표되는 육아지원정책 또한 기관 보육 위주로 확대되어 온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정부의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는 많지만, 실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양육자

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을 찾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가정 내 양육’을 ‘기관 보육’과 상응하는 양육 형태로 개념화하기보다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이나 영유아 시기 자녀 양육에의 요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본전제 하에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를 기르는 일로 이해한다. 또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육아지원정책 전반 중 기관보육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논의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로 수행한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구성한 것임.

1) 육아지원정책 중 기관보육 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을 포함한다.

2. 지원요구를 반영한 양육지원정책

정부의 가정 내 양육지원은 양육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와 같은 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건강 관련 지원 등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그 대안으로 마련된 양육지원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양육지원 요구와 그 대안,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3. 양육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과 교육·보육료지원을 비롯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인 아이돌보미 사업, 시간제보육 제공, 지역 내 종합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상담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지원 사업,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임신출산아이사랑보

양육 지원 요구	대안	제도화된 지원 정책
경제적 부담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조세감면 양육 비용 지원 파견 돌봄 서비스	세금 환급 제도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사업(종일제)
갑자기 맡길 곳 없음 내 시간이 없음	긴급 돌봄서비스 육아의 쉽표 Refreshment 기회	아이돌보미 사업(시간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혼자 키우는 어려움(독박육아)	가정 내 역할 부담 양육 경험의 공유	아버지 교육, 아버지 육아휴직 공동육아나눔터
공동 돌봄 공간, 장난감·도서 대여 등 필요	거점형 원스톱(one-stop) 양육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양육 자신감 부족 양육 관련 정보 필요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양육상담	부모교육 기회제공(대한민국 부모학교) 임신출산육아 포털 운영(아이사랑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기반 맞춤 정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 보육맘)
맞벌이 가정 양육 및 돌봄 위한 시간 필요	일가정 양립 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시간 단축 근로제

주: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13. [그림 1-2-1]임.

[그림 1]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에 따른 대안과 제도

육포털 등이 대표적이다.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의 내용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1,302명) 및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요구와 그 개선안을 구체화하였다.

가. 현금 지원 정책

■ 가정양육수당

1) 정책 및 이용 현황

가정 내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은 양육수당으로 대표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에도 적정 양육수당 지원 안이 제시되어있다. 2015년도 연령별 양육수당 이용은 35개월 이하에서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의 재원이 증가하여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2009년에는 약 324억에서 점차 증가해오다가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2013년에는 약 8,810억이 되었고, 2014년 이래로 약 1조 2천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육예산 대비 비율은 2012년까지는 1.9~3.4%였는데 반해, 2013년부터는 21.3~23.4%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 개선요구

조사결과²⁾ 부모들의 양육수당에 대한 의견에서는 ‘증액’ 요구가 60%를 상회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요구도 23%로 나타나 수당 금액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 수준은 형평성을 이유로 어린이집 비용지원과 동일한

〈표 1〉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계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71 개월	72~ 취학전
전체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양육수당	1,004,154	385,309	308,916	131,197	65,717	39,698	37,570	35,747
장애아동 양육수당	2,169	9	242	528	513	365	286	226
농어촌 양육수당	3,023	1,043	1,054	470	316	76	38	26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5년 보육통계. p.250-253 재구성(2015년 말 기준)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65, 〈표 Ⅲ-2-3〉임.

〈표 2〉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예산 전체(A)	1,710,430	2,127,510	2,478,380	3,028,567	4,131,345	5,273,819	5,186,136	5,270,824
예산액(B)	32,390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1,211,510	1,219,200
양육수당 보육예산대비(B/A)	1.9	3.1	3.6	3.4	21.3	23.0	23.4	23.1
전년대비증가율	-	102.7	36.7	14.3	758.2	38.0	-0.3	0.6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 (2015년 말 기준)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67, 〈표 Ⅲ-2-4〉임.

2)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에서의 영유아 부모 1,3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수준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급하는 국외 사례를 살펴보다도 실제 양육비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의 현금 지원은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3) 개선방안

가) 소득 수준 고려한 차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부 정책 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정책의 변화가 너무 잦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함은 중요하다.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 위기 가구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저귀·조제분유지원정책처럼 실물이나 바우처 제공 등의 보완책이 고려될 수 있다.

나) 기관 이용비용 중 선택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부담하도록 한다.

보편적 지원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동일 금액의 지원보다는 제한적인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영아기 양육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정책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기관이용 비용 지원에서도 '맞춤형 보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선택적 시간에 대한 부모 자부담 등을 담아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보완해 갈 것을 제안한다.

나. 돌봄 지원 정책

■ 아이돌봄서비스

1) 정책 및 이용 현황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된다. 연도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은 2011년에는 53,827명이었고, 점차 늘어나 2015년에는 78,625명에 이르렀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연도별 이용현황은 2011년 이용 영아는 6,693명에서 2012년 14,0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0,382명이 이용하였다. 6~18개월 미만의 이용비용이 비교적 높다. 이를 위한 예산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1년 6,250억에서 2012년에는 1조를 넘어서서

〈표 3〉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업 예산

단위: 명,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아동수	53,827	59,802	70,994	75,623	78,625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아동수	6,693	14,022	18,506	27,455	30,382
전체예산	62,498,468	67,066,976	102,159,325	122,976,672	122,802,660
국비	39,711,000	42,894,000	66,060,000	78,516,000	78,716,000
지방비	22,787,468	24,172,976	36,099,325	44,460,672	44,086,660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71 〈표 Ⅲ-2-9〉, p.75 〈표 Ⅲ-2-14〉, p.77 〈표 Ⅲ-2-18〉 내용을 재구성함.

2015년에는 1조 2,280억이 편성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유로는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29%, '이용하고 싶은 때 단기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24.8%,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22.7%,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21.3%로 나타났다.

2) 개선요구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원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34.9%), 파견되는 돌보미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28%), 이용 비용 중 지원금에 대한 증액(16.9%), 신청 절차 간소화(9.1%),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7.8%) 등으로 개선요구를 제시하였다. 이는 낮은 서비스 접근성 또는 아이돌봄인력의 공급 부족, 파견도우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개선방안

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위한 이용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서비스 직접 제공자인 돌보미의 질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나, 시간당 6,500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질을 논하는 것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부지원 비용을 높

일 수 없다면, 이용 부모의 자기부담금을 일정액 올려서라도 현실적인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나) 아이돌보미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한 질 개선이 요구된다.

제공지역의 여건과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기한다. 특히 영아전담형 아이돌보미 양성이 필요하다.

다) 노인인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제언한다.

현재 서울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³⁾와 서울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은빛아이지킴이⁴⁾ 서비스처럼 현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시돌봄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시간제 아이돌봄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시간제보육

1) 정책 및 이용 현황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는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3,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000원 전액을 부모자비 부담으로 한다. 시간제보육은 육아종합지

3) 서울시에서 긴급보육서비스의 하나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60시간이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신체건강하고 육아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돌봄서비스임.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보육·가족·외국인주민. 아이돌봄기동대 설명 (검색일: 2016. 10. 13)
<http://woman.seoul.go.kr/files/2016/09/57cf7a91c0ed87.89204380.jpg>

4) 생후 20개월 ~ 만 11세(초6)까지의 자녀를 둔 동작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은빛 나눔터에서 일시돌봄 혹은 등하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출처: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2016). 은빛아이지킴이 운영규정.)

〈표 4〉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예산(B)	2016예산(B)	증감(B-A)	%	세부명세
보육예산 전체(C)	5,186,136	5,270,824	84,688	(1.6)	
시간차등형보육 지원(D)	7,507	11,959	4,452	(59.3)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예산 비율(D/C)	(0.14)	(0.23)	-	-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2015년도 말 기준), p.255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80 (표 III-2-21)임.

〈표 5〉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총계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남		
이용인원	10,085	383	68	79	83	58	95	9,702	
이용건수	47,006	4,875	727	834	1,100	308	1,906	42,13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80 (표 III-2-20)임.

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2015년도 지원 예산은 약 75억이었고, 전체 보육예산 약 5조 1천8백억 중 약 0.14%였다. 2016년에는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예산은 약 120억으로 이는 2016년도 전체 보육예산 중 약 0.23%의 금액으로 지원 예산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2015년 이용 인원은 10,085명, 이용 건수는 총 47,006건이다(〈표 5〉 참조). 시간제보육(일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급한 용무/자녀 동반이 어려운 용무 때문에’ 62%, ‘양육 중 잠깐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11.9%,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 적응과 사회성을 길러주려고’ 10.9%,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면서 임시 이용’ 6.4%,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보다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4%의 순서로 나타났다.

2) 개선요구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충분성과 이용 편리성

이 낮아 이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 경험 이 있는 경우, 개선 필요 부분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충하여 그 이용 접근성 증진해야 한다는 점(41.3%), 시간제보육 전문프로그램 운영 (16.3%), 이용 절차를 간소화(10.9%), 지원금 증액(9.8%), 시간제보육에 대한 홍보 강화(7.6%) 등의 순서로 지적하였다.

3) 개선방안

가)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도 홍보 및 제공처 안내가 선결되어야 한다.

양육의 어려움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양육의 어려움으로 파악되나, 시간제보육의 이용은 겨우 0.5%로 나타나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제보육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제공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

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높인다.

갑자기 맡길 곳이 없다는 점과 잠시 육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되는 가정양육 지원요구이다. 시간제보육을 위한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수요에 맞는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므로 갑작스런 필요 시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용을 위한 신청도 다소 복잡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 정보 제공

1) 정책 및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아가사랑, 마음더하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합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입소대기·보육료 결제·시간제보육 신청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오픈’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2.: 4). 아이사랑 홈페이지는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소통·참여 게시판, 상담실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다. 지역별 어린이집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임신 출산과 관련한 상담/정보제공, 참여게시판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 시 유용했던 점으로 포털을 통해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등 정책 이용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8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모르던 출산 육아 정책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8%, 육아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육아 정보를 얻게 된 점에 4.2%,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가능하다는 점에 3.1%가 답하였다.

2) 개선요구

시급한 개선점으로 ‘제공 정보 내용의 확대(22.5%)’, ‘수록된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22.2%)’, ‘플러그인 등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최소화(20.9%)’, ‘다른 포털(서울시보육포털 등)과의 연계 강화 또는 통합(18.2%)’, ‘정보검색의 간편화(14.3%)’ 등 다양한 개선점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비율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3) 개선방안

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육아정보 및 서비스 이용신청 창구 일원화를 제언한다.

‘아이사랑’ 포털은 보육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기관 미이용 부모에게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 특히 정책신청서비스, 모바일 앱 제공, 임신육아상담 기능이 제공됨에도 이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기능이 ‘서비스 이용신청’임을 고려하여 종합 포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온라인 육아 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유아 부모가 지역 맘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생생한 정보 업데이트가 실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육아정보에 있어 마치 집단지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정보들이 왜곡되는 경우뿐 아니라 부정적 심리

를 자극하는 것도 많아 올바른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나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이용하기 쉽게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개발한다.

■ 부모교육

1) 정책 및 이용 현황

2016년 5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동으로 추진하는 ‘참 좋은 부모되기 대한민국 부모학교’를 준비하였다.⁵⁾ 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사업목적으로 한다.⁶⁾

전체 응답자 중 부모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1,302명 중 101명으로 8% 정도로 저조하다. 특히, 만 1세 미만의 영영아 가구(7명), 기관 미이용 가구(12명)의 부모교육 경험자 수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부모교육을 받은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비율이 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27%), 구청이나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기관(21.7%), 건강가정지원센터(13%), 병·의원(11.9%), 민간교육기관(11.8%), 산후 조리원(4.1%)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아 집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경험이 많았고, 유아 집단과 기관 이용 가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가 많았다.

2) 개선요구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생애주기별)’ 29.7%, ‘부모교육 시간의 현실화(주말,

퇴근 후 등)’ 16.8%, ‘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집 가까운 곳)’ 14.8%, ‘부모교육의 의무화’ 12.9%, ‘내 주변의 부모교육 제공기관 찾기 서비스 구축’ 10%,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7.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3) 개선방안

가) 국가 수준의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다.

지자체 수준에서 부모교육 조례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여 정책영역으로서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부모교육 법제화를 통한 정책 실행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부모교육 현장 적용 또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종합서비스센터 등의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부모가 부모교육 제공처 및 내용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부모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전문 강사로 위촉하며 강사의 수급과 질을 관리한다. 생애주기별(자녀 연령별)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무원 직장교육, 군에 부모교육을 의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취약가정이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례 관리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6년 5월 6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popup/20160502popup.jsp>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6년 5월 6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

다) 부모교육 의무화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과 연계한다.

출생 신고 시 또는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부모를 위한 소정의 온라인 또는 직접 이수하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생후 36개월의 영아시기에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모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행복카드의 결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핀란드의 ‘엄마상자’처럼 양육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담은 상자를 부모교육 이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격려문, 물품, 간단한 놀잇감 등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지원 정책을 연령별로 상황별로 정리한 안내서를 상자에 담아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개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부모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생명존중, 부모 됨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과계열에 교과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으로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

하여 연령대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아버지 교육과 조부모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더불어 함께하는 양육의 실현을 위해 아버지와 조부모 교육의 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나눌 기회와 실제 양육 기술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는 아버지 교육, 조부모 교육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고, 어머니 위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특별히 특화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경우 예비군 훈련처럼 부모교육 참여 시 근무처에서 공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 현물지원 정책

1) 정책 및 이용 현황

현재 직접 육아 물품 지원을 하는 것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이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⁷⁾

〈표 6〉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월64,000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²⁾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86,0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p.4

출처: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p.86 (표 III-2-22)임.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검색일: 2016. 6. 13)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39

2) 개선요구 및 개선방안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 는 지원 금액의 증액에 대한 요구(66.5%)가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21.3%이다.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도출 되는 개선안은 우선 대상 가구 선정의 기준이 건강보험비용이라는 점이 불합리하므로 대출금 상환 부분처럼 실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함과 제공 물품의 금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 건강 관련 지원정책

1) 정책 및 이용 현황

영유아와 그 가정의 건강관련지원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등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금액 중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⁸⁾.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은 생후 4개월 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예 방접종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세 가지 정책 중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6세 미만)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의 인지 정도도 높고 이용 비율은 93%를 웃돌았다.

2) 개선요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한 결과, '건강관리사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는 의견이 30.5%, '이용비용 지원금을 증액해야한다' 19.6%, '이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17.6%,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16.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건강 검진 사업의 개선 요구는 '건강 검진 내용의 내 실화'에 대한 요구가 72.8%로 주류를 이루었다. 다음은 '월령별 건강검진 문자 알림 서비스' 16.7%, '건강검진 운영 소아과 확대' 10.2% 등의 순서이다.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의 경우 개선점으로는 현재 미지원 대상인 백신(경피용 결 핵 백신,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6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접종 종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설명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7.3%,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13.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3) 개선방안

가) 검진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건강 관련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국가 예방접 종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안으로 무엇보다 건강 검진내용 내실화에의 요구가 높음을 고려하여

8) G-health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검색일: 2016. 10. 25)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245&cNttId=220&menuNo=200597>)

검진 병원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병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다 섬세한 검진을 도모해야 한다.

나) 영유아건강검진 시 양육지원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93%정도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양육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하여서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카더라' 정보가 많다. 또한, 처음 해보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부모들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검사 필수항목·선택항목 등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모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 거점형 종합서비스 제공

1) 정책 및 이용 현황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거점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대표적 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의 중복을 논하기에 앞서 영유아 전체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저조함에 주목해야 한다.

2) 개선요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이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33%,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이 32.6%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접근성의 부족을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내용 홍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맞벌이인 경우 이용시간이 다양하지 못함에 대한 지적(22.6%)이 아닌 경우(9.2)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3) 개선방안

가) 종합서비스센터의 사업내용을 고통으로 개발하고 병행 운용한다.

설치된 센터의 수가 현격히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정책수요자 요구에 따르는 표준사업 내용을 설정하고 다양한 센터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대상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의 재편 및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수요자에 비해 그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복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동 사업화를 통한 제공 기회 확대를 모색함이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그 내용, 프로그램 및 추진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공동사업모형을 개발하고 두 기관 모두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나) 농어촌지역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한다.

정책실무자 면담을 통해 농촌 지역은 영유아를 위한 이용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육아품앗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육아품앗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육아품앗이가 활성화되고 모임형성 및 장소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 일·가정양립지원

1) 정책 및 이용 현황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운용 중이다. 영유아 자녀 양육 시기에 이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2) 개선요구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라는 응답이 세 명 중 두 명에 달하는 65.8%로 다른 요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지원금액의 증액’ 17.9%, ‘복직/인사 고가에 불이익 최소화’ 8.2% 순서이다.

3) 개선방안

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다. 문제는 실제 사용에의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일터의 분위기, 복직 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그 도입을 강

제하기에도 무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제도의 활용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과 국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사용 의무화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4. 나가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 속에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황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주된 관심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교육비용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현재 운용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지만, 지원확대와 비용지원 상향 조정으로 수렴되는 정책수요자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양육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과 입안, 제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온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에 가정 내 양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양육의 가치, 부모-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 전환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